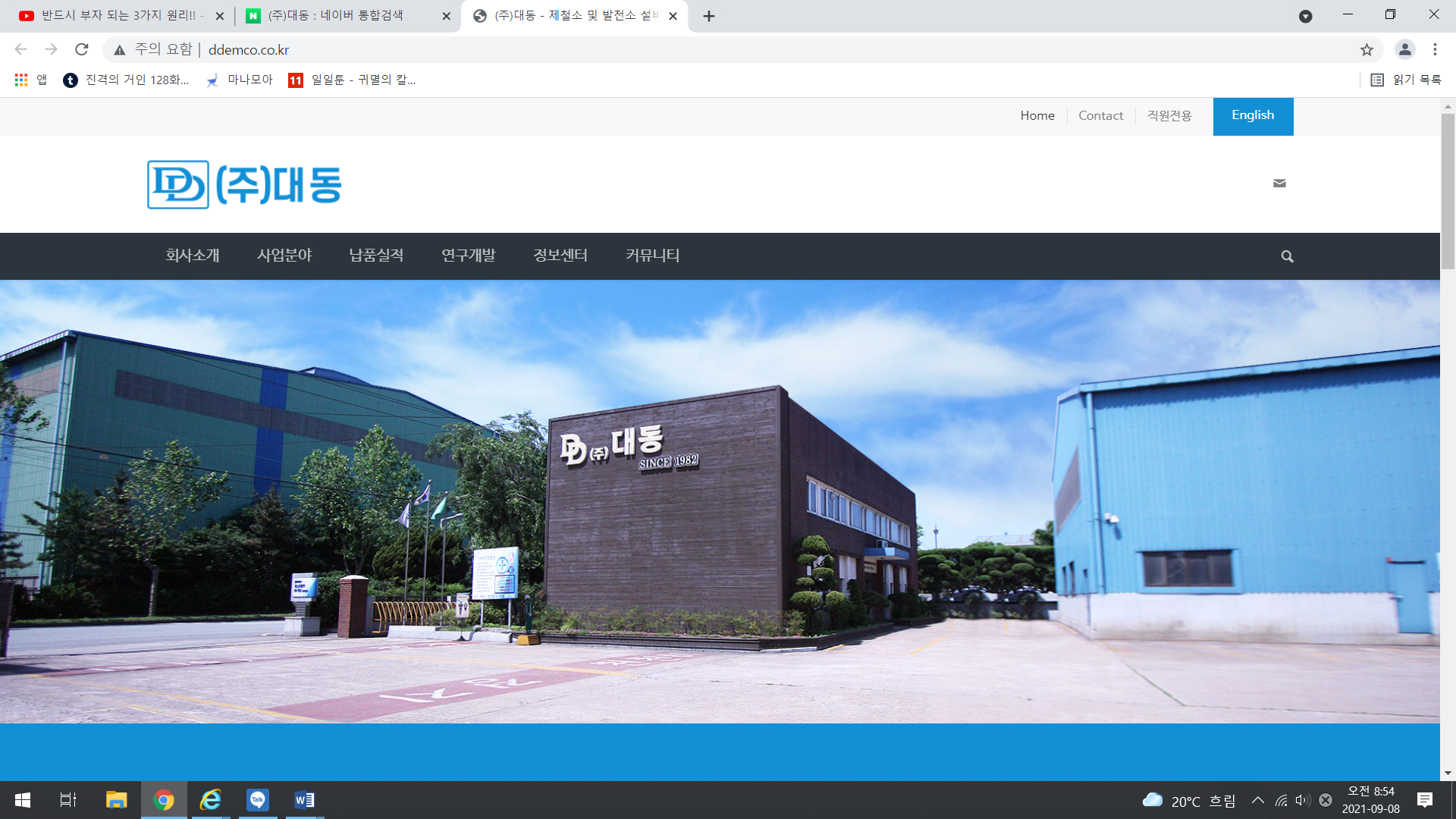
제 정 2021. 3. 2.

개 정 2021. 9. 6.

2022. 11. 8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본인은 ㈜대동의 임직원으로서, 준법경영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원칙,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

(1) 공정한 경쟁

본인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한다. 본인은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하며, 담합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상생 협력

본인은 협력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부당한

요구 및 보복적 행위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부패행위 금지

본인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공무원,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4)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본인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셋째,** 본인은 주요 사업의 추진, 계약 체결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넷째,** 본인은 국내외 법규, 사내 규정 및 본 행동규범에 위반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다섯째,** 본인은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등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회사의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함

**CP는 왜 필요한가?**

① 공정한 경쟁 문화의 조성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예방

③ 투명·정도경영 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



**CP의 구성요소**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③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⑥ 내부 감시체계 구축

⑦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1.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

**(1) 하도급법의 적용**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용역 등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3배 손해배상 책임)**

**1.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2.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3. 부당반품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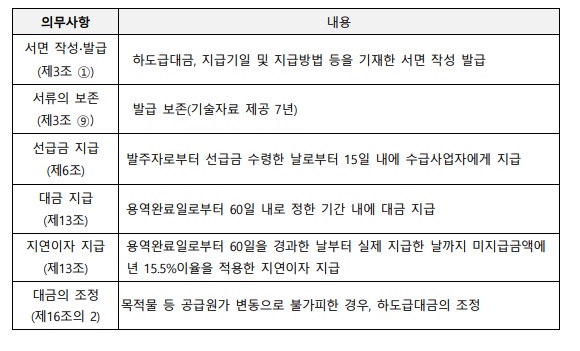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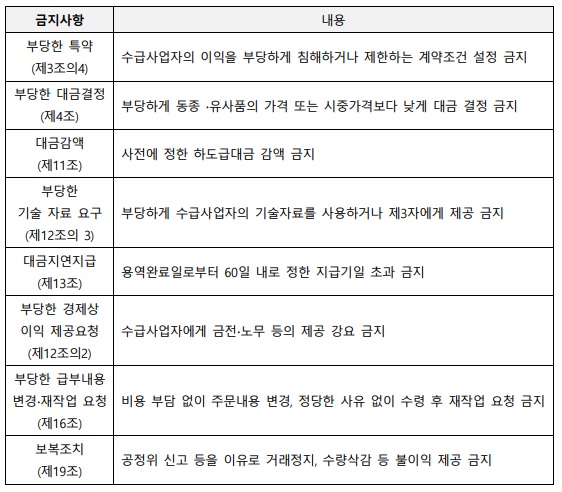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도급법 주요내용**





**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 작성 발급** (제3조)

**하도급법 상의 “서면”이 되기 위한 6가지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 및 위탁의 내용(목적물)

-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 제공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 발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시 작업지시 전 추가∙변경서면 교부



-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추가 위탁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

- 추가 위탁 물량 또는 내역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

**교부를 미루는** 행위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의 **실제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사례연구2**

**[관련사례]** 강림중공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Welding Body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Convection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함

**[공정위 심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4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의미**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용역위탁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

[예]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부당성의 판단은 하도급대금 결정의 내용, 수단,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고려

[예] 수급사업자에게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정상적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최초 입찰시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인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격의 적정성 불문)

**사례연구**

**[관련사례]**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하고 하여

최저가 2개 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공정위 심결] 낙찰 혹은 유찰선언 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 부당특약금지** (제3조의4)

**“부당특약”의 의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조건



- 원사업자가 입찰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 수량, 단위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을 하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관련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계약조건, 통상적인 거래관행, 위탁내용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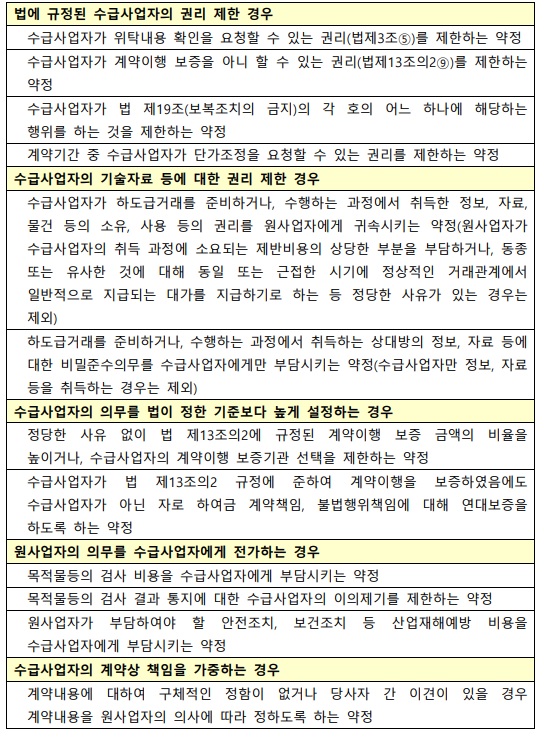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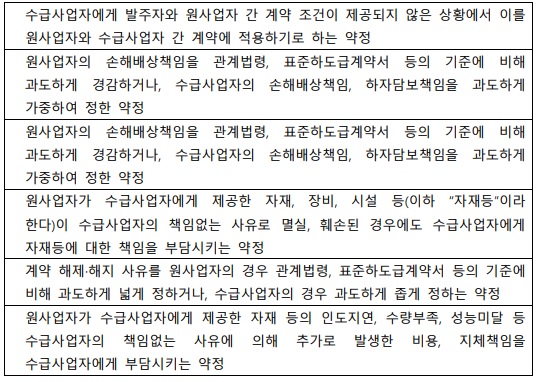
[예] 인허가, 품질관리 관련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처리 비용

원사업자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비용

**\*그 밖의 유형별 부당특약[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19-4호)등]**

****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위탁취소”의 의미**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 해지)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 내용을 변경(해제, 해지)하는 행위

**“수령거부”의 의미**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예]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사전에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구두로 추가 위탁 후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영업취소·영업정지 등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지연하여 기간 내에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목적물의 품질∙성능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사외

협력사들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1600여 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공정위 심결]**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관련

시스템에는 위탁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여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목적물 수령일(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지

- 검사비용(검사 장비·SW 구입비용 포함)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나, **“발주처 검사지연,**

**발주처 납기준수” 등의 사유로는 예외 인정 불가**

**■ 부당 감액금지** (제11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부당 감액”의 의미**

- 협찬 요청,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그 이유나 금액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행위

[예]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기한 등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행위

다른 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추가비용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감액하는 행위

- **계약조항, 특약 등 대금 감액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 하도급대금 감액시에는 감액대상, 금액, 방법, 사유와 기준 등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하자, 납기 지연 등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해당 부분을 수령 거부 또는 반품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원사업자가 수령한 목적물의 결함 또는 하자를

직접 처리한 후 불량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감액한 경우

- 하자, 납기 지연으로 인한 목적물 가치의 저하가 명확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가치 감소분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경우



- 원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가 합의된 경우에, 합의 전 발주된 물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금지** (제12조의3)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의미**

-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경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설비배치도,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장비제원,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설계도, 회로도, 제품개발계획,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기술자료 제공요구시에는 요구 대상(범위), 목적, 비밀유지방법, 권리관계, 제공 대가,

대가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유용”의 의미**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예]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 기술자료를 공여하는 행위



- 신제품 등에 대한 관계 기관 신고 서류에 수급사업자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 기술개발 약정 후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있는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 하자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내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기술자료 제공에 대해서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공동 기술개발 계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음

**[공정위 심결]**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과징금

**■ 선급금 지급의무** (제6조)

**“선급금 지급의무”의 의미**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15일 초과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 2019. 개정일 현재 연 15.5%)

- 기성금 등의 지급시 기 지급된 선급금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공제할 수

없음(기성비율에 맞게 공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의미**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60일 이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참고)**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년 15.5%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대금\*0.2\*지연일수/365)

- 발주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기간으로 하도급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적용해야 함



-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 등이 발견되어 재작성을 시킬 경우, 하자 등이 치유된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기산 가능

- 목적물이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시점을 급부 수령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그 증거자료(예. 테스트 결과보고서)까지 수령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기산 가능

(계약서류상의 납기일 이전에 한함)



-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 혹은 지연지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태아선설은 2009년 아라뱃길 제6공구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앤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계약한 쇄석골재 및 혼한골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억 13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심결]** 혼한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1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제13조, 제16조의2)

**“설계변경 등”의 의미**

- 위탁 이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 특정 원재료에 소비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되는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시 조정을 위한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조정금액에서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는 행위**

- 발주자와는 물가변동 등을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약정,**

**국가계약법(계약 후 90일 경과 요건) 등을 이유로 조정하지 않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의미**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도**, 어음수표의 부도, 당좌거래의 정지·금지,

파산신청, 회생·간이회생절차 개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물변제 금지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공정거래법의 적용**

**■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카르텔은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는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 됨.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ㆍ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항의, (2)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멸**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단의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입증)**

1.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2.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예 1> 가격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

<예 2>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3>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40조 제2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40조 제2항)**

*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그 밖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정보」 : 가격, 생산량 외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과당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한 경우

•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위법한 경우**

•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예시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예시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시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위법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그 행정지 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②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1)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 행정지도 :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함

**(다)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라)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마)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개념**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판례】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1983.1.18.선고81도824)

• 법(舊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舊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 15849, 1999.2.23.선고)

**★ 입찰 관련 행동지침**

**◎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1. **사업참여 관련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주정보,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과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1.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1. **입찰가격의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1.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1.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타 사업자와 교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해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 수집,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바)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① 합의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간 합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 조건

- 정보 교환 :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며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포함 (단, 중간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한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음)

- 합의 : 명시적 의사연락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 포함

＊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의 경우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임

② 경쟁제한 :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 시장상황, ㉡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 점유율, ㉣ 정보의 특성, ㉤ 정보교환의 양태, ㉥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효율성 증대효과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법 제42조)**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나) 과징금(법 제43조, 시행령 [별표6] 2.3)**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여기서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의미함

**(다)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가) 과징금 면제 및 시정조치 면제 또는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나)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 감면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하더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불가**

**(라)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감면 취소**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율내용 및 행동지침**

■ 거래의 유형,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 하도급법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수급사업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은 적용됨.

■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당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감액, 재작업 지시, 정보성과물에 대한 사용권리 제한,

협찬금 요구 등)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됨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위탁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대금지급 지연”**

- 회사 내 지급절차의 지연 등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용역 성과물에 대한 검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켜 계약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감액”**

- 위탁자의 사정에 의해 용역의 사양 변경, 재작업 또는 추가 용역의 제공을 요청한 후 수탁자의

작업량 증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설비 투자와 인력을 준비하는 등 수탁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 하였으나,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일부 용역을 취소하고 위탁 거래 감소분을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낮은 대가”**

- 계속적 계약에서 설비 증설과 인력 보강 등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유지하는 행위

- 수탁자에게 짧은 납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정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청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재작업”**

- 위탁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사전에 정한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협찬금, 상품구입 요구”**

- 금액, 산정 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판매촉진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위탁자의 결산대책 등 손익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요청하는 행위

- 위탁거래 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해당 거래 수행과 무관한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제한”**

- 정보성과물이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시키는 행위 (권리양도, 2차이용에 관한 비용을 사전 협상하여 대가에 반영한 경우는 예외)

**사례연구 1**

**[관련사례]** 한국야쿠르트는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2002년도부터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심결]** 한국야쿠르트는 위탁대리점의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연구 22**

**[관련사례]**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점 전반에 걸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 및 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공정위 심결]**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음,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저앟고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사례연구 32**

**[관련사례]**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2008년 기간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

**[공정위 심결]**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로서,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본 편람의 내용이나 공정거래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율준수관리자나 자율준수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 최정호 상무이사 010-4534-4777,** [**jhchoi@ddemco.co.kr**](mailto:jhchoi@ddemco.co.kr)
* **자율준수담당자 : 정해성 과장(품질보증팀) 010-9543-5567,** [**hsjeong@ddemco.co.kr**](mailto:hsjeong@ddemco.co.kr)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불공정 거래행위**

|  |  |  |  |
| --- | --- |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Checklist)** | **유(한다)** | **무(하지 않는다)** |
|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 - 거래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상대방과 협의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  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 귀책에 의한 검수지연, 물품 검사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는가?  -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지는 않는가? |  |  |

**■ 부당한 공동행위**

|  |  |  |  |
| --- | --- |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Checklist)** | **유(한다)** | **무(하지 않는다)**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 | \*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함(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기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지는 않는가? |  |  |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  |  |  |
| --- | --- |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Checklist)** | **유(한다)** | **무(하지 않는다)** |
| **하도급법**  **적용확인**  **(하도급법**  **제2조)** | - 거래업체가 중소기업인가?  - 제조, 수리, 용역, 건설위탁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  |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기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  |
| **물품 구매**  **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  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  |  |  |  |
| --- | --- |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Checklist)** | **유(한다)** | **무(하지 않는다)** |
| **부당한 위탁**  **최소 및 수령**  **거부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  |  |
| **검사 및**  **결과 통지**  **(하도급법**  **제9조)**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에 공정,  타당하게 정하는가?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로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지나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는 않는가? |  |  |
|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하도금거래 개시 또는 대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  |  |  |
| --- | --- | --- | --- |
| **점검항목** | **점검사항(Checklist)** | **유(한다)** | **무(하지 않는다)** |
|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  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가? |  |  |
|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  |  |
| **부당한 대물**  **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  |  |